

모델리티(세부원칙) 2차 초안과 향후 농업협상전망



김영진 농림부장관(오른쪽 끝)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이 'WTO국제시민집회'에 참석하여 가두 집회를 하고 있다.

농업협상특별위원회는(의장 스튜어트 하빈슨) 지난 3월 28일 비공식회의를 통해 DDA농업협상안에 대한 2차 세부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농업협상특별위원회는 당초 3월말까지 세부협상안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의장 2차 초안은 1차 초안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하는데 그쳐, 여전히 국내 농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모델리티 2차 초안의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델리티 2차 초안의 주요 내용

관세감축에 대한 사항(표1-1)은 1차초안과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 다만, 개도국은 관세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감축률도 미세하게 조정하였다.

당초 개도국은 관세감축 구간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번 2차 초안에서는 4단계로 좀더 세분화하고, 전략품목(strategic product)도 특별품목(special product)으로 개칭하였다. 하지만, 관세감축에 대해 1차 초안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고관세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행 국내 관세율에 비해 감축률이 너무 높게 제시되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실적으로 국내 농산물 중 소비량이 많거나 식량안보상 필요한 141개(실품목 33개)품목의 관세율이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기타 138개 품목(실품목 31개)도 관세율이 120%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2차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가는 사실상 생산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된다.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수·출입국간 감축률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 (표1-1) 관세감축

구분 내용	DDA세부협상 1차 초안				2차초안 변경내용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관세감축율	90%초과	평균 60% 최소 45%	120%초과	평균 40% 최소 30%	좌 동	120%초과	평균 40% 최소 30%	
	15~90%	평균 50% 최소 35%	20~120%	평균 33% 최소 23%		60~120%	평균 35% 최소 25%	
	15%이하	평균 40% 최소 25%	20%이하	평균 27% 최소 17%		20~60%	평균 30% 최소 20%	
이행기간	5년		10년		좌 동	좌 동		
기 타			전략품목의 경우 평균 10%, 최소 5%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을 3단계 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전략품목을 특별품목으로 개명			

처럼 견해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접근물량(TRQ)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수입이행률 65% 미만인 경우는 저율관세쿼터물량에 대한 관세도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비량이 증가한 양념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개도국지위만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수용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특별긴급관세(SSG)에 대해서도 감축률에는 변동이 없지만 선택적 조건부 내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즉, 특별품목(SP)의 관세감축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간의 선택조건(특별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 못함)이 삭제되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면 SSG를 활용한 좀더 추가적인 신축성의 여지는 있다.

농업보조에 대한 내용도 1차 초안과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생산제한직접지불(Bule

Box)에 대해 개도국의 Blue Box 철폐 시기를 4년 동안 유예하는 대안이 추가되었다. 우리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급실적이 없어 사실상 1차 초안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본안대로라면 2004년 기준으로 1조4천900억원에 이르는 국내 보조금의 90% 이상을 추곡수매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6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정부의 쌀수매정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 농업보조와 관련한 수출국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농업보조금이 국제 교역을 왜곡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농업 교역자유화' 주장의 이면에는 수출국의 명백한 비교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각국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은 농업보조 정책을 철저히 반대하는 입

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EU는 농업을 경제적 사안 이상으로 인식하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DDA 출범을 적극 지지했지만 농산물 보조금 삭감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으며, 특히 프랑스가 가장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다른 국가의 시장개방은 바라면서 농업보조에 있어서는 EU 이상으로 자국 농업을 보조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업보조금을 부활한 '농가보조법'을 입법화하는 등의 보호무역주의 입장 회기에 주목할 만 하다.

우리 정부는 농업협상이 지연되더라도 EU나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 전망

회원국간 견해차이를 좁혀 세부안을 타결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세부원칙 협상에 대해 전혀 몸달아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는 “국제사회 신뢰를 고려하여 양허안 제출 시한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허안 제출시한을 준수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0개국에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양허안 제출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긴박한 국제정세를 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 양허안을 먼저 분석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양허안 제출시한을 최대한 늦추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추세가 중국과 남미, 아시아 등 시장개방에 민감한 개발도상국가에서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정부의 협상자세는 '자국의 이익 추구'라는 냉혹한 국제현실을 외면한 너무 순진한 자세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어찌됐든, 농업협상특별위원회에서도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세부원칙 수립시한을 지키지 못하는데 따른 향후 협상 일정과 방식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농업관련 협상은 올해 6월 전까지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농무관을 통해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막후협상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정부의 협상 전례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다.

이번 농업분야 세부원칙 협상은 국내농업의 생사를 가름할 사안인 동시에 국가의 식량안보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각계의 일관된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향후 협상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세**

향 후 협 상 일 정	
○ 4월 ~ 6월	: 세부안 타결을 위한 막후협상 예정
○ 5월 19일 ~	: 회원국간 양자협상 예정
○ 6월, 7월	: 농업관련 협상
○ 9월 10일 ~ 14일	: 제5차 WTO각료회의(멕시코)
○ 11월	: 농업관련 협상
○ 2004년 12월	: 품목별, 정책별 양허협상
○ 2004년 12월 31일	: WTO협상 최종 타결